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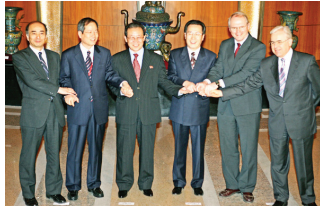
7~8면

북한 핵과 6자회담

2·13 합의가

보여 준 것

3면



노무현의 위기와
'진보 논쟁'

4면

차베스는 독재자가 되고 있는가?

6면

여성 칼럼

— 성해방이 가능하다

5면

32호 2007년 2월 24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고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위협

이란 공격 반대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일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란 공격 계획을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계획'을 수립해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의 기자 사이먼 바스케터가 미국이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조지 부시와 미국 지배자들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이란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WMD)를 추구하는 이란 정권이 [세계 평화] 위협하고 있다며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능력을 정확히 평가했음이 입증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이 앞으로 5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나 알카에다 연계설이 마치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듯이 이란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시는 미군에게 이란 내의 이란 네트워크를 "색출해서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미군에게 이란 첩자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해도 좋다고 허가했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이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해 미군이나 무고한 이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응징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페르시아만에 증강 배치하고 있다.

부시는 수백 대의 전투기뿐 아니라 50척의 군함도 거느리게 될 항공모함 전단 두 개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했다.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주변 국들에 배치됐고,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장거리 임무를 훈련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하루 24시간 내내 30~40일 동안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

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암살단을 운영했던 국무부 부장관 존 네그로폰테는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이] 이란의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이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란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안보와 이란에 걸린 미국의 이익을 침

해할 것입니다."

순찰 활동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미군 전투기들이 대(對)이란 무기 밀수 단속을 구실로 이란-이라크 국경 지대에서 더 공격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려 한다.

한 국방부 고위 관리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군력이 주된 구실을 할 텐데, 그중 하나는 전쟁 억제 구실을 할 것이다. 그것은 국경 통제나 항공 주권이 될 수도 있고, 더 역동적인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역동적"이라는 말은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일컫는 군사용어이다.

현재의 정치 공세에서 가장

»2면으로 이어짐

〈맞불〉 온라인 기사

[http://www.](http://www.counterfire.or.kr)

[counterfire.or.kr](http://www.counterfire.or.kr)

이집트를 뒤흔드는 노동자 투쟁

이집트에서 노동자 파업이 들불처럼 번져가며 무바라크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과 함께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 1년 평가

모랄레스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대중 운동과 자본주의적 합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볼리비아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미FTA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권마저 억누르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제한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국제 소식들

- 이탈리아비행사미군기지반대시위
- 에라도르 대중운동의 급진화
- 기니노동자총파업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요구 투쟁의 진전

'유전무죄'를 보정한 노무현의 3.1절 시면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3.17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3월 17일 | 서울 도심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인용해도 될까요?

“우리는 잘못된 사회주의 주사파의 의료법을 깨부수기 위해 항랑한 이 벌판에 나와있다.”

–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한국의정회장 박희두

“뺨조각을 빠라고 볼 수 없다.”

– 광우병 쇠고기를 옹호하는 주
미대사 이태식의 궤변

“이명박 전 시장은 파렴치한 범죄인이다. … 이명박 전 시장은 당시 자신의 선거법 및 범인 도피 문제가 불거지자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각 지역구에 전달된 정치자금의 실체를 폭로해 같이 죽겠다’고 당을 협박했다. 강삼재 전 의원도 이명박 전 시장을 두고 ‘그 인간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말했다.”

– 정인봉의 폭로

“[박정희 시대에] 근로자들은 생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업적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점차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부와 전경련이 만든
경제학 교과서 내용 중

성신여고 직원: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만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교장: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불려온 현실입니다.”

– 비정규직 악법의 결과

》1면에서 이어짐

위선적인 면은 여러 미국 관리들의 거둔 주장, 즉 이란은 이라크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새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류스(David Petraeus)는 “이라크 문제에 간섭하는 이란과 시리아의 위협에 대처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통일되고 안정된 이라크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살해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미국과 영국 점령군이 저지르는 만행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투다.

이라크 전쟁 반대 장교가 법정 투쟁 1회전에서 승리하다

지난 2월 7일 미국 군사법원은 이라크 전쟁 복무를 거부한 첫 미군 장교 에런 와타다 중위에게 ‘무효심리’[재판 중지]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 할 만하다.

와타다는 2003년 대학 졸업 직후 미 육군에 지원했다. 9·11 테러 뒤 많은 미국 젊은 이들이 그랬듯이 “조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 장교였고, 그래서 진급도 빨랐다.

2005년 초, 이라크 파병을 명령받은 와타다는 ‘모범’ 장교답게 “이라크 현지에서 맞닥뜨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전 준비’는 애초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2006년 1월 오랜 고민 끝에 와타다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두 차례나 그의 신청서를 반려했다.

결국 소속 부대가 이라크로 출발하기 직전인 2006년 6월 7일 와타다는 이라크 파병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미군 병사들과 …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 사명감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법체계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미 육군 검찰당국은 그를 군무 이탈과 상관 모독, 품위 훼손 등의 혐의 — 최고 징역 6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로 기소했다.

항명

그러나 와타다의 ‘항명’은 반전 운동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지난 1월 27일 대규모 반전 시위 이후 와타다 재판은 반전 운동의 새로운 초점으로 급부상했고, 재판이 시작된 2월 5일에는 영화배우 손 펜 등 1천여 명의

미국 반전 운동

반전 시위대가 법정 밖에서 그를 지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군 당국이 처한 심각한 딜레마를 반영한다.

미군 수뇌부는 이라크 현지의 군인과 참전 군인들이 갈수록 반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그들은 군대 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와타다를 속죄양 삼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와타다가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와타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고, 판결 당일 와타다는 직접 증언대에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었다. 그래서, 미군 재판부는 이런 곤혹스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효심리’라는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

군 검찰은 3월 19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혐의 내용으로 두 차례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지난해 6월 7일 이라크전 복무 거부 기자회견을 가진 에런 와타다 중위

원칙)에 따라 두번째 재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검찰과 재판부가 두번째 재판을 강행한다 해도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지배자들에게 여전히 곤혹스런 문제로 남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3월 19일은 이라크 전쟁 개전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이라크 참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미군 46명 가운데 장교는 와타다뿐이다. 파병 거부자 중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병사는 모두 18명이며,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캐나다 등으로 ‘망명’한 상태다.

와타다의 영웅적 저항은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속과 확전 시도에 맞선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그의 저항은 미국 지배자들의 전쟁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며, 부활 조짐이 역력한 미국 반전 운동에 영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와타다가 승리한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라크 전쟁 복무를 거부할 용기를 얻을 것이다.

김용민

이란 공격 준비는 단지 상처입은 야수의 최후 발악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고유한 논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벌였다가 패배한 전쟁의 교훈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확전

최근 워싱턴 반전 시위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중이 이라크 재앙에 반대해 들고일어나자 백악관은 더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기성 정치권 내에는 이란 확전과 이 무모한 행동의 효과를 돌

려싸고 심각한 전술적 이견이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최고위층 사이에는 이라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확전뿐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잇따른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란 공격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백악관의 네오콘과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이란 공격이 매우 합

리적인 선택이다.

이라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란을 타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지배자들과 미국의 중동 지배력을 확립하려면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늘 버트던 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위 관리는 런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란이 점점 더 의기양양해지고 대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란이 중동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는 부시 정부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거의 무제한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문제는 그들이 또다시 살인 만

행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반대 운동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브래드퍼드 대학교의 평화연구소 교수인 폴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네오콘의 흐름이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꼭 필연적이지는 않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태도가 [부시의] 결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레어의 재임 중 마지막 초저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2·13 합의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김하영

지난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가 합의됐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긴장 —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 — 은 2·13 합의로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실 2·13 합의의 전망은 여러모로 불투명하다.

2·13 합의에서 명시된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이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그 대가로 중유 5만 톤을 제공받는다는 것이 거의 전부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지적대로, “핵시설 폐기에만 합의하고 그 뒷부분은 일단 미뤄둔 합의”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부시 정부가 그 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악행은 보상하지 않는다”던 부시 정부가 입장을 180도 바꿨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이전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양자회담을 한사코 마다하던 부시 정부가 베를린 북미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다.

셋째, 방코텔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에서도 미국이 후퇴했다. 그 동안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BDA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부시 정부는 BDA 문제와 핵 협상은 관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던 부시 정부가 베를린 회담에서 BDA 문제 해결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켰다.

넷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적어도 이번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금의 “2차 북핵 위기”는 부시 정부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말이다.

“올해는 이란의 해”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개번 매킨맥이 지적하듯이, “기본적인 요인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이라크 상황의 악화, 이란 문제 및 중동 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부시 정부는 2만 1천5백 명

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려고 하고 있고, 2·13 합의 이틀 전에는 이란을 이라크 무장 세력의 배후로 지목해 이란 공습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시 정부의 진정한 실세 딕 체니의 보좌관인 존 해너는 최근 한 모임에서 부시 정부가 2007년을 “이란의 해”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공격이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로 힘을 분산할 여력이 없다. 이것이 타협을 선택한 이유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태도 변화는 과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미국은 대북 ‘전쟁’에서 ‘대화’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그 동

안 미국은 군사적 제재도 아니고 대화도 아닌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왔는데, 북한 핵실험은 이 방식의 문제점(미국의 동북아 관리 능력 저하)을 드러냈다. ‘전쟁’할 여력이 없다면 일단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북한 핵을 동결하는 동시에 그것이 주변국에 미칠 효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라크와 이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각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부시 정부는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 관철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 “악의 [한] 축”과 내키지 않는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다

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반전 운동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

수많은 암초들

2·13 합의에서 미국이 여러 타협을 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정치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보상에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은 데다 중요한 문제들은 뒤로 넘겨졌다.

첫째,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핵심 문제는 실무그룹의 일로 넘겨졌다. 합의문에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위한 과정을 60일 이내에 시작한다는 것 말고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둘째, 북한에 제공될 보상도 제네바 합의 때와 비교하면 약소한 편이다. 제네바 합의 때는 핵시설 동결만으로 매년 50만 톤씩 중유를 (8년간) 지원받았다.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IAEA 요원 복귀의 대가로 받게 될 중유의 양이 5만 톤에 불과하다. 불능화 조치에 상응하는 1백 만 톤도 제네바 합의 2년치에 불과한 데다 제공 조건도 모호하다.

셋째, 이번 합의문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인 경수로 지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본격적 논란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2·13 합의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 첫째, 이번 합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무기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목록은 사찰로 연결될 민감한 문제다.

둘째, 핵무기 폐기 문제는 초기 조치 과정에서는 그냥 넘어간다 해도 2단계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북한은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려 할 것 같지 않다.

셋째, “불능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13 합의 직후 북한은 중유 1백 만 톤 제공이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의 상응 조치인 것으로 보도해, “불능화”를 가동 임시 중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이미 낳고 있다.

여전히 제국주의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는 중동

2·13 합의는 말 그대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일 뿐이다. 부시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시 정부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일단 중동 정세에 전념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변화란, 전에는 북한을 6자회담에 묶어두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그러기 위해 당근도 제공해야

함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에 비춰 봤을 때, 2·13 합의의 앞날은 상당 부분 중동 정세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동에 전념해야 하는 동안에는, 미국은 여러 문제들을 일단 덮어두고 그럭저럭 관계를 관리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동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면 미국은 덮어뒀던 문제를 언제든 다시 꺼내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하려 할 수 있다.

문제는, 중동 전쟁의 반사

이익 격으로 한반도 날씨가 개는 앞글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처럼 여겨 “2·13 합의 문 발표로서… 미국의 패권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고 본다면, 현재진행형인 미국의 전쟁에 대한 반대는 자연히 뒷전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에서 확실하게 패퇴하지 않는 한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속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 어렵다. 더구나 자국 정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2·13 합의의 앞날이 상당 부분 중동 정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라크 점령 반대(그리고 자이툰 철수)와 이란 공격 반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해야 한다.

노무현의 위기와 ‘진보 논쟁’

최근 ‘노무현 정부 평가와 2007년 대선 전망’을 둘러싸고 진보 학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다. 최장집 교수의 〈한겨레〉 인터뷰 내용을 조희연 교수가 비판하고 이어 손호철 교수까지 토론에 가세하며 흥미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자 노무현까지 손수 글을 써 논쟁에 끼여들고 나섰다.

이 글에서 노무현은 수많은 배신과 개악을 “상황의 제약” 탓으로 돌리고 ‘복지 확대·용산 미군기지 이전·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등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을 자신이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복지 예산의 증가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한 부풀리기가 대부분이었고 이마저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양극화는 복지 예산 소폭 증가를 무색하게 했다.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마저 억누르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까지 자행하는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동북아를 끔찍한 전쟁터로 몰아넣을 전략적 유연성 추진 과정의 일부가 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성과라고 치장하는 것도 마한가지다.

노무현은 이런 배신과 개악이 “상황의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변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은 미국이나 우익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 것들이 아니다.

노무현 자신이 이라크 파병을 “남는 장사”라 했고 한미FTA는 “소신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열우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누더기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에서는 이토록 철저했던 정부가 민주 개혁에서는 불철저하기만 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언론 개혁 등에서 노무현 정부는 우익 기득권층의 압력에 굴복해 쉽게 개혁을 포기해 버렸다. 개혁법안들은 껌테기나 누더기가 됐다.

조희연 교수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부는 “보수적 저항을 돌파하는 제도정치 바깥의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을 짓밟는 데 주력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 씨가 희생당했고, 하준근 열사가 살해당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과 자결로 내몰렸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결코 “유연한 진보”가 아니다. 폭력적 신자유주의·친제

국주의 정부일 뿐이다. 노회찬 의원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을 뿐이다.

이런 배신과 개악이 노무현 정부의 위기와 열우당의 붕괴를 낳고 있다.

중도개혁 정부의 파산은 정치적 좌우 양극화를 낳고 있다. 오른쪽에서는 한나라당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득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나라당 자문교수인 국민대 김형준조차 ‘국민의 보수화’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양극화

박근혜와 이명박의 진흙탕 싸움은 이런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인봉은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범인 도피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이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폭로했다. 이명박의 전 비서관 김유찬의 추가 폭로는 이명박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낼 듯하다.

박근혜는 최근 방미를 통해 “나는 아버지[박정희]의 피를 물려받은 딸”, “미국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존재”라며 ‘친미 독재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이전투구에 여념 없는 추악한 우익의 득세에 대중이 우려하고 반감을 가지는 것은 공감할만하다. 조희연 교수도 “한나라당의 집권은 신보수주의 시대의 시작[이며] … 진보 세력에게 불리한 상황만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개혁 사기꾼들이 이런 정서를 이용하려는 데 있다. 유시민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적 반동으로 소비니즘이 나타날 가능성” 운운했다. 우익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개혁 사기꾼들이 지지층 재결집과 권력 연장을 노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한나라당 [의 위험] 때문에 [열우당과 그 후신들] 지지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은 타당하다. 따라서 조희연 교수가 강조하는 “반수구 전선”도 필요하지만 손호철 교수가 주장하는 “반신 자유주의 전선”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 뿐 아니라 노무현과 열우당에도 맞서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정치 대안과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의 원족 그림은 90퍼센트의 자이툰 철군 찬성 여론과 과반수에 이르는 한미FTA 반대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해 진취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광범한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도해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열우당과 한나라당에 독립적인 선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희연 교수는 “급진적 개입을 통해 전체적인 지형 자체를 급진화”시키는 “운동 정치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한미FTA, 레바논 파병 등에 맞서는 대중투쟁을 건설하는 과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명훈·전지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연대전략’이 당 안팎의 좌파적 반발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2월 10일 당 중앙위에서 문성현 대표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연대전략’ 항목을 ‘2007년 사업 계획’에서 다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 이를 뒤에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대회 가기 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두 달 전과 비교해 보면 맹백한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 조짐은 중앙위 전부터 있었다. 2월 8일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는 “사회연대전략은 대선기획단 보고 사항”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바람직한 변화는 ‘사회연대전략’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다함께’ 등 좌파적 당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확인되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포괄적 방안으로서의 ‘사회연대전략’은 기각하겠다고 시사했다.(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다.

이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공표한 만큼 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연대전술’론(‘전술적 활용’론)은 당 지도부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연대전략’을 진지하게 반대하는 활동가들도 일부는 ‘전술적 활용’론을 지지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론자들은 ‘사회연대전략’을 노골적인 계급협력주의라고 옳게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이 (하나의 전술로서) 당의 대선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술은 개혁이 아니다

물론 전략과 전술은 구별해야 한다. 전술이 계급투쟁에서 특정 과제나 특정 운동 부문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라면, 전략은 노동계급을 권력 장악으로 이끄는 전술들의 결함을 뜻한다.

이런 개념에 비추 보면, ‘전술적 활용’론은 ‘사회연대전략’을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대선용 득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첫째, ‘사회연대전략’을 전략이 아니라 전술로 한정한다 해서 그 핵심적인 정치적 내용은 — 정규직의 양보라는 — 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술을 계획으로 오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전술’이 지배계급을 속이기보다는 우리 편인 노동계급을 속이게 될 것이다. 지배자들은 다년간의 국제적·역사적 경험을 통해 매우 계급의식적이므로 노동계 지도자들의 품수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 편인 후진적 인자들이 될 것이다.

둘째, 노동자 정당의 전술은 노동계급의 단결에 이바지해야 한다. 선거 전술도 응당 그래야 한다. 그러나 ‘다함께’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활용’론은 득표를 위해 노동계급의 단결을 훼손하는 선거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셋째, 그런데 ‘사회연대전략’이 대선에서 득표력 증대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자체도 미지수이다. ‘사회연대전략’의 목표는 당의 지지층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이미 당은 영세자영업자를 겨냥해 카드수수료 인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물론 당은 정규직을 넘어 비정규직으로까지 지지층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과 박탈당한 사람들도 당의 정치적 청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진정한 성해방은 가능하다

일레인 헤프먼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여성 해방을 말했을 때, 그는 단지 남녀 평등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엥겔스는 성(性)의 관계가 경제적 필요나 답답한 성 도덕에 의해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가슴을 성형하려고 돈을 모으고, 데이트 중에 강간당했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몰라 답답해한다.

10대 임신과 성병이 증가하지만 성교육은 여전히 근엄하고 모범적인 가족 모형에 기초해 있다.

많은 여성은 성 개방과 경제적 빈곤의 끔찍한 결합을 경험한다.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 보고서들 보면, 전 세계 도시 여성 열 명 중 한 명이 살면서 성매매 경험을 한다.

알바니아에서는 경제적 붕괴로 10만 명의 여성이 해외의 사창가로 팔려갔다.

어떤 나라든 성 관광 수입에 의존한다. 타이에서는 50만 명의 소녀가 성 산업에서 일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잔인한 폭력으로 고통받는다. 영국에서는 매주 두 명의 여성이 파트너와 몇 파트너에게 살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성이 임금 노동에 진출한 것은 사회에서, 여성을 구타하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권리’로 여겨진다.

여성들이 항상 억지로 이런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구실을 받아들인다.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이 남성을 사귀고 남성을 볼 수 있는 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가득한 잡지를 구입한다.

요즘에는 가사 일이 줄었음지언정 더 많은 성적 기교와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것은 전혀 없다.

엥겔스는 오랜 옛날 인류가 인위적으로 고정된 성적 역할 구분이나 여성 천대 없이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는 무계급 사회이기도 했다.

러시아 혁명중에 볼셰비키는 사적 관계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통제를 모두 철폐했다. 나중에 스탈린은 그런 성과를 없앴다. 그러나 우리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성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런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화에서 개성을 박탈당한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가슴이 큰 여성이 더 매력적이다’가 여전히 유력한 원칙이다.

케이트 모스[유명한 슈퍼 모델]는 현대 여성의 이상인 마른 몸을 패션쇼에서 실컷 보여 준 뒤에 램덴스[누드 댄서] 관객의 무릎에 앉아 추는 선정적인 춤] 클립을 종종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면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이 성해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이상적 몸매를 만들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가슴을 성형하려고 돈을 모으고, 데이트 중에 강간당했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몰라 답답해한다.

많은 여성은 성 개방과 경제적 빈곤의 끔찍한 결합을 경험한다.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 보고서들 보면, 전 세계 도시 여성 열 명 중 한 명이 살면서 성매매 경험을 한다.

알바니아에서는 경제적 붕괴로 10만 명의 여성이 해외의 사창가로 팔려갔다.

어떤 나라든 성 관광 수입에 의존한다. 타이에서는 50만 명의 소녀가 성 산업에서 일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잔인한 폭력으로 고통받는다. 영국에서는 매주 두 명의 여성이 파트너와 몇 파트너에게 살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성이 임금 노동에 진출한 것은 사회에서, 여성을 구타하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권리’로 여겨진다.

여성들이 항상 억지로 이런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구실을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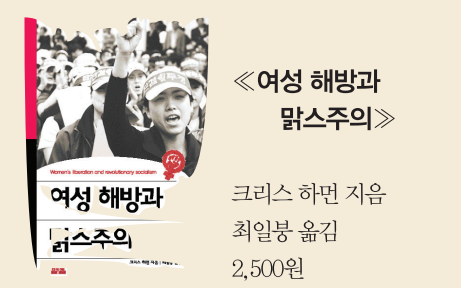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이 남성을 사귀고 남성을 볼 수 있는 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가득한 잡지를 구입한다.

요즘에는 가사 일이 줄었음지언정 더 많은 성적 기교와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것은 전혀 없다.

엥겔스는 오랜 옛날 인류가 인위적으로 고정된 성적 역할 구분이나 여성 천대 없이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는 무계급 사회이기도 했다.

러시아 혁명중에 볼셰비키는 사적 관계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통제를 모두 철폐했다. 나중에 스탈린은 그런 성과를 없앴다. 그러나 우리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성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런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크리스 하먼 지음
최일봉 옮김
2,500원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차베스의 수권법은 독재의 수단이 아니다

이수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대한 독재자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포고령 입법권(수권법)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수단이 결코 아니다. 차베스가 개정한 1999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약을 받는다.

첫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차베스의 포고령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11개 분야에 국한된다. 포고령으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

둘째, 각종 견제와 제약 장치들이 있다. 최고재판소의 위헌 심판에 따라 포고령은 폐지될 수 있다.

또, 국민투표를 거쳐 폐지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도 유권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번 포고령 입법의 경우는 유권자의 5퍼센트 이상만 요구해도 국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 1천6백만 명 가운데 80만 명 이상이 요구하면 차베스의 포고령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또,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포고령 입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 토머스 새년조차 “수권법은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차베스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부시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전까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노무현도 2004년 총선 이후 최근 열우당이 쪼개지기 전까지 양대권부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라크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쟁점들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거슬러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은 부시나 노무현이었지 차베스가 아니었다.

또, 차베스가 비록 합법적 선거로 집권했지만 집권 후 독재자로 변질했다는 점에서 히틀러·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민주독재자”라는 비난도 있다(〈경향신문〉 2월 6일치). 이런 비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

적 승리를 거두며 집권했을 때부터 차베스는 장차 베네수엘라에 독재 정권을 수립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듬해 기존 헌법을 훨씬 더 민주적으로 개정한 새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칠 때도 그는 독재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또, 2001년 11월 차베스가 포고령 입법권을 사용해 49개 개혁입법을 발표했을 때도 반(反)차베스 세력들은 그를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 개혁입법이 토지 소유를 민주화하고, 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국영 석유공사(PDVSA)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처들이었음에도 그랬다.

부시

오히려 차베스를 독재자라고 비난한 자들이 2002년 4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런데도 쿠데타 주모자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대법원의 판결로 죄다 풀려났다.

그리고 당시 군사 쿠데타를 공공연히 지지했던 자가 지난해 말 대선에 출마해 거리낌없이 차베스를 비난하는 자유를 누렸다. 이게 과연 독재 정권에서 가능한 일인가?

차베스를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민주독재자”로 비난하는 것은 특정 현상을 구체적인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떼어내 파악하는 역사적 추상주의나 형이상학적 역사유비론의 전형일 뿐이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권익을 짓밟은 진짜 독재자였다. 그러나 차베스의 포고령

베네수엘라 민중은 차베스의 수권법을 환영한다

입법권의 주된 목표는 지역의 자치평의회를 확대·강화하고, 기간산업들을 국유화하고, 국가 관료들의 부패를 근절하는 등 “민중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은 차베스의 포고령 입법권이 진정한 사회 개혁을 더 가속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줄 각종 개혁조치들이 국가 관료들의 사보타주와 부패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현실에 실망하고 분노한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더 중시한다.

얼마 전 칠레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티노바로메트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적이다.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나라 국민들의 자국 민주주의 만족도는 평균 38퍼센트인 반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만족도는 1998년 32퍼센트에서 2006년 57퍼센트로 상승했다.

진실은 차베스가 독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증진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차베스의 선의에도, 또 그의 개혁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를 넘는 것은 대중 자신의 몫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활동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활동은 차베스의 조처를 ‘비민주적’이라고 터무니없이 비판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차베스의 이니셔티브를 비난하는 우익과 한편에 서서는 민주주의는 어렵도 없다. 오히려 그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그것이 직면하게 될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준비 태세를 아래로부터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여수 이주노동자 수용소 참극

노무현 정부가 죽었다

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사실, 화재 사건 자체는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9분이 9명의 생사를 좌우한 시간이었다.

2백54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철창까지 돼 있는 구금 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부 관리들의 머릿 속엔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사라지고, 엉뚱하게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방화’가 이 사태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방화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역겨운 술책이다.

정부는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정작 화재 현장 공개조차 거부했고, 몇몇 확실치 않은 목격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스스로도 이 라이터를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경찰관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방화 문제로 쟁점 돌리기

정부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99퍼센트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토끼몰이하듯 잡아다 24시간 햇빛도 들지 않는 방에 가둬두고 CCTV로 감시하는 곳이 외국인 수용소다.

이번에 희생당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처럼 1백8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 지내는 곳이 바로 외국인 수용소다.

양식장에서 온 손이 해지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도 1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간 중국 동포 김성남 씨를 그 자리

에서 잡아 가둬 결국 불에 타 죽게 만든 게 이 곳이다.

희생자 진신희 씨 유족은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기업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어찌 불법 체류자라며 철창 안에 감금단단 말입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번 참사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다.

이 범죄 정부는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희생자 사체를 해집어 부검해 놓고, 피범벅이 된 시신을 유가족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법무부장관 김성호의 분향을 막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성호는 이런 유가족들에게 사죄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밀쳐낸 뒤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법무부는 18명의 부상자 중 2명을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며 청주 외

여수 화재 참사는 단속·추방 정책의 산물이다

국인 수용소에 다시 구금했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16명도 퇴원하면 즉시 재구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정부에게서는 일말의 인도주의도, 양심도,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법무부는 ‘인권 실태 조사·개선’, ‘계호 인력 증원’ 등 보잘것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을 뿐, 무고한 사람이 9명이나 죽어나갔는데도 책임자 처벌은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방화로 인해 사태가 발생한 만큼 보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기가 곤란하다”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인다.

무엇보다 이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참사다.

지난해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 출입국사무소 구금 시설에서 18미터 창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더 큰 참사가 벌어졌다. 올해 1월

에도 벌써 단속 과정에서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들은 지난 3년 동안 8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고 추방해 온 악랄한 단속·추방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특히, 작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해마다 재계약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하락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30퍼센트나 증가했다. 노동권을 제약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단속·추방이 계속되고, 구금 시설이 존재하는 한 이런 참사는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따라서 단속 중단과 구금 시설의 폐쇄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항의 운동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법무부 장관 퇴진 등 즉각적 요구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반인권적 외국인 수용시설 폐쇄 등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외국인 수용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해 운동 내 모든 세력들이 ‘공대위’에 참가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우리 운동 안에는 정부의 ‘단속 자체를 중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단속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에 주력할 것인가’, 외국인 수용소 폐지나 개선이나 등 여러 이견들이 있다. 이런 이견들은 앞으로 공동 행동 속에서 토론·논쟁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속 중단’ 같은 공동의 요구는 존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13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중국어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가 ‘단속도 필요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들에게 벌금 등의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대위’가 “진상 규명”을 핵심 요구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방화로 보인다’고 발언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2월 25일 집회에 적극 참가를 호소하자.

이정원

Forums

서울 동부

기후 변화

-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2월 27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연사: 안준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변화팀장), 정호중(〈맛불〉기자)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부산대

‘보호소’에서 불탄 ‘코리안드림’ - 이주노동자의 현실

3월 13일(화) 저녁 6시 30분

문의: 010-4569-0501

부산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2월 23일(금) 오후 8시

장소: 토즈(서면역 1번 출구 마리포사 4층)

연사: 이수현(주간 〈맛불〉 공동편집자)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맛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맛불〉 웹사이트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와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쩌해. 무서워...’ 밤에도 이런 생각이 나요.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한 이주노동자는 “여기도 여수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 나면 다 죽어요”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을 면회하는 동안 소방 훈련을 알리는 요란한 방송이 계속 나왔지만 영어와 중국어 통역만 돼서 다른 언

어를 쓰는 이주노동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용소 내의 괴로운 일상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 방에 19명이 딱 붙어서 자요”, “씻을 때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오고 먼지 날리는 방에서 밥을 먹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다른 방에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 않아요.”

24시간 방에만 갇혀 있는 이들이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쉴 수 있는 운동 시간은 하루 한 번이라는 규정과 달리 두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화재 이후 출입국 직원들이] 잘 해 주는 건 없고 담배나 라이터가 있나 확인만 자주 해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더욱 강화된 것이다.

통제

그러나 여수 참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짐승 사냥하듯 잡아들여 감옥이나 다름없는 ‘보호소’에 가둬둔 것에서 비롯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 정책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 잡으면(단속을 안 하면) 사람도 안 죽어요”, “한국 올 때 천만 원까지 들어요. 천만 원 벌려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말이란 일이 익숙해지면 비자가 끝나요. 쫓겨난 친구들이 마음 아파서 많이 울어요”, “비자 주고 다 풀어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아닌 거 같은데...”

이들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삼수(가명)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병원이 아닌 파출소로 끌려가 수용소에 오게 됐다. 라나는 하루 20시간의 중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았고, 무려 1년째 수용소에 갇혀 있다. 두 사람 다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 비용이 없어 애를 태우

고 있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산재를 당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르준은 사장이 수술 비용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갇혀 있다. 그는 그 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합법화해야만 이 비참함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정부 규탄 대회

일시: 2월 25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

3월 개강 맞이 강연회

교과서와 다른 현실은 대학생들을 한숨짓게 하고 때론 절망 한가운데로 내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로, 취업 준비로 잠시 잊고 지냈던 세상 일들을 신입생 여러분과, 또 그보다 앞서 대학 생활을 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진보적 관점으로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진보적 대학생이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토론 3월 10일 ~ 3월 11일
주최 대학생 '다함께'
참가비 하루 5,000원, 이틀 8,000원
참가문의 atgstudent@hanmail.net / 02-2271-2395

토론 주제

노동의 비정규화 | 입시 교육 비판 | 지구온난화 | 국제여성의 날 기념 행사 | 한미FTA | 이라크 침략 4년 | 이주노동자의 현실 | 신자유주의와 대학 | 미국의 저항 운동

연사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의 저자. 현재 <한겨레> 칼럼니스트.
- 김민웅** 성공회대 국제 NGO 대학원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EBS <토론카페>를 진행한 바 있다.
- 버지니아 로디노** 지난 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50만 명 반전 시위를 이끌었던 미국 '평화정의연합'의 국제연대위원.
- 이필렬**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 전환' 대표.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의 저자.
- 강수돌**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충남 신안1리 이장으로 생태 환경 훼손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미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활발한 비판 활동을 하고 있다.
- 조희주** 전교조 전 부위원장. 교육시장화와 입시경쟁교육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아노아르**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 위원장.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소'에 불법적으로 수감됐다.
- 토르나 림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